



농촌소멸 대응·에너지 전환 ‘속도’

2030년까지 주민주도형 햇빛소득마을 500개소 조성

영농형 태양광 도입으로 농지 보전·수익 창출 병행 경관 훼손·갈등 최소화 모두 혜택 받는 모델 지향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8월 24일 여주시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를 방문하였다. 구양리 마을은 주민 주도형 마을 태양광사업의 모범사례가 된 곳으로 송미령 장관은 직접 태양광 발전 현장을 둘러본 뒤 마을 주민들과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는 ‘22년 산업부의 ‘햇빛두레 발전소’ 시범사업 지원을 받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였다. 발전 시설은 마을 공동 소유의 마을회관, 체육시설, 마을창고, 잡종지(농지 전용) 등에 1MW 규모이다. 이를 통해 나오는 수익은 마을협동조합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며, 마을식당 무료급식 운영, 마을 행복버스 운행 등에 쓰이고 있다. 이런 모델을 바탕으로 새 정부는 국정과제로 주민공동체 주도의 햇빛소득마을 500개 조성을 발표하였다.

새정부의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공동체를 통해 농지·저수지



▲ 24일 송미령 장관이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등 활용 가능한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 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하는 사업모델을 말한다. 특히,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적극 도입하여 농지의 기능을 보전하면서 발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마을 경관 훼손, 발전 수익 외부 유출 우려 등으로 ‘햇빛소득마을’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는 체계적이고 농업인·농촌 주민이 주체가 되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햇빛소득마을’ 조성과 함께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재생에너지지구 내 농지 및 농업법인 규제 완화로 영농형 태양광의 집적화·규모화를 유도하며, 태양광 등 다양한 부존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햇빛소득마을

등 태양광을 비롯한 질서정연한 재생에너지 공급을 통해 새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기여하겠다”면서 “다만, 농촌에 남아있는 태양광 발전설비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안하여 농촌 주민 모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농촌소멸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etimes.com

농업농촌, 기후대응 - 탄소중립 어떻게 하나요?

기후위기 대응 역량강화 지자체 설명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의 기후대응에 대한 지자체, 농업인 등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소통·홍보를 위해 권역별 설명회와 기후산업국제박람회와 연계

하여 포럼과 전시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농업인들은 막연히 기후위기에 대해 두려워하고, 어떤 대책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을 찾기 어려웠다. 그래서 농식품부

는 농업농촌분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관련해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현장 역량강화 설명회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설명회는 8월 20일 경북(경산), 경남(창원) 지역을 시작으로 전북·전남, 경기·강원, 충북·충남 등 권역별로 10월말까지 개최할 계획이다.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극한

기후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력과 대응방안 마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매년 ‘기후변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타난 지역별 농작물의 재배적지 변화 등 자료를 활용해 지자체가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백두대간법 20주년 기념’ 국회심포지엄 개최

생태·문화·지역 상생 성과 조명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백두대간법)’ 시행 20주년을 기념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임호선 국회의원, 한국환경생태학회,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녹색연합, 백두대간옛길보존회, 백두대간보전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백두대간 산림생태계의 20년간 변화상 ▲백두대간 보호·산림복원의 성과와 미래 비전 ▲백두대간 보전과 시민 사회의 역할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내년에 수립되는 10년 기본계획에 반영해 백두대간 보전 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다.

백두대간법은 2005년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됐다. 산림청은 현재 6개도, 108개 읍·면·동을 포함하는 27만7,645헥타르(ha)의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지정해 보전·관리하고 있다.

산림청은 보호정책으로 경제적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백두대간 인접 거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과 소득 증진을 위해 20년간 백두대간보호지역 주민 1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1,477억 원의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등을 지원해 지역 상생에도 힘쓰

고 있다. 아울러 2006년부터 백두대간 684km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해 5년마다 백두대간 식생, 식물상, 동물상 등 자연환경의 변화상을 모니터링하는 자원실태변화를 조사해 정책 기반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백두대간 산림생태계의 학술적 기반 강화에 기여한 이정은 한국산림과학회 연구원, 백두대간 인문자원 발굴과 미래 가치 활용에 기여한 김우선 백두대간옛길 보존회 이사장, 백두대간 희귀식물의 과학적 보전 연구를 위해 노력한 한성경 한국수목원연구원 관리원 주임에 백두대간 유공 표창 3점을 수여했다.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토마토 재배지 바이러스병, 철저한 관리 당부

정식 전 재배포장 주변 전염원 잡초 제거 철저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최근 토마토 재배지에서 바이러스병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시설 내외부 잡초 제거와 매개충 초기 방제 등 철저한 주변 환경 관리를 당부했다.

도내 주요 발생 바이러스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TYLTV) ▲토마토퇴록바이러스(ToCV) 등으로, 팽택·광주·용인 등 9개 재배지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발생률이 꾸준히 상승했다.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는 2022년 30%, 2023년 22%, 2024년 44%로 나타났다. 토마토 황화 잎 말림 바이러스와 토마토 퇴록 바이러스는 같은 기간 10%→22%→33%로 증가했다.

올해 7월 광주·팽택·양평 등 8곳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별꽃·

뿌리뱅이·큰방가지뚱 등 동계 일년성 잡초와 가시잎한련초·개비름·닭의장풀·미국까마중 등 하계일년생 잡초 9종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돼, 잡초가 주요 매개원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토마토는 잎 말림·괴저(괴사)·황화·시들 증상이 나타나며 정상적인 착과가 어렵고 수확량이 급감한다.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와 ‘토마토퇴록바이러스’의 매개



충은 각각 담배가루이, 담배가루이·온실가루이로, 단순 접촉으로는 전염되지 않는다. 그러나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의 매개충인 총채벌레는 농작업 중 작업 도구에 의해 전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예방을 위해 ▲재배시설 내외부 잡초 주기적 제거 ▲출입구·환기구 50메쉬(1~2mm) 방충망 설치 ▲끈끈이 트랩 활용 ▲매개충 발생 초기 계통이 다른 약제를 번갈아 살포(3~7일 간격) ▲감염 개체 즉시 제거 등을 권장했다.

박중수 환경농업연구과장은 “토마토 바이러스병은 정식 초기 시설 내외부 환경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심 증상이 보이면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에 진단을 의뢰해 신속한 대응 방법을 확인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etimes.com

KRC 한국농어촌공사

KRC가 물들인 세상 행복으로 물드는 미래

한국농어촌공사는 맑고 깨끗한 용수공급으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